



尹 대통령,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인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시스

유권자 4428만명... '경기도·60세' 최다

4·10 총선

21대 비해 28만5764명 증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4·10 총선 유권자가 총 4428만11명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연령별 유권자는 60세 이상이 약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국내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선 유권자 수는 제21대 총선 당시 4399만4247명보다 28만5764명이 증가했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2191만8685명(49.53%), 여성은 2233만3234명(50.47%)으로 여성 유권자가 41만45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769만5466명(17.39%)과 70세 이상 641만4587명(14.49%)으로, 60세 이상이 1411만53명(31.88%)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

어 50대 871만1608명(19.69%), 40대 785만7539명(17.76%), 30대 655만9220명(14.82%), 20대 611만8407명(13.83%), 10대(18~19세) 89만5092명(2.0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1159만1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울시가 830만840명, 부산시가 288만2847명 순이었으며 세종시는 30만126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는 총 45개다. 기초단체장 선거인 수는 28만7088명, 광역의원 선거인 수는 84만6643명, 기초의원 선거인 수는 112만3151명이다.

국내 선거인명부는 3월 19일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3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거대 정당, 불공정 공천 즉각 취소해야”

새로운미래 기자회견

박은정 등 '불공정 4인방' 규정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을 앞두고 편법대출과 전관예우, 성범죄 변호, 아빠찬스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불공정 4인방'으로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보들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새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사진)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관비리'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민주당 후보 및 '아빠찬스' 공영운 민주당·이용호 국민의힘 후보를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먼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이



력'을 문제삼았다. 오 위원장은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입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고 지적했다.

또,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향해서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강북을 지역성범죄자 변론 이력의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며 했던 말을 잊었냐”라며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구자룡(서울 양천구갑)·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김상욱(울산 남갑)·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를 일일이 거론했다.

/박정익 기자

전국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쇼크'

40대 유튜버, 40곳에 몰카 설치
野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 조장”
선관위 “불법행위 강력 대응”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4월 5~6일 열리는 가운데, 40대 유튜버가 전국 각지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잠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버 A씨의 범행장소를 인천과 경남 양산 등 15곳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전투표소 등에 잠입해 설치한 카메라의 상단수를 특정 통신사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인 충전 어댑터 형태로 설치해 통신 장비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 A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고, 지난 2022년 대선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지난 3월 31일 오후 인천 미추출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민주당은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해당 유튜버가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흥기가 같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렸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저급한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만드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사전투표 열기를 막으려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범행 동기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배후 유무 등을 낱알이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투표장내 불법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영덕 더불어민주당연합 대표 등은 지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해당 사건의 조사상황을 듣고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전국 모든 투표·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등에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런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양문석리스크’ 재점화... 11억 편법대출 의혹

(안산갑 예비후보)

양 후보 “은행측 ‘업계의 관행’ 설명”
與 “가짜서류로 못 받아갈 대출 받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과 비이재명계를 향한 말폭탄으로 당 안팎의 사퇴 요구가 나왔던 양문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이번에는 자녀 편법대출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수도권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슈가 총선을 10일 남기고 터졌음에도 양 후보는 총선을 완주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31억2000만원에 구입한 후, 2021년 4월 대학생 신분인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진 빚 7억5000만원을 갚았다.

양 후보의 장녀는 고정적인 수입 없이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 삼아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도마에 올랐고 편법 혹은 불법 대출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양 후보의 장녀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후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 후보의 장녀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에선 “속물이고 썩거루룩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쓴 글도 발견돼 논란이 커졌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4월 1일부터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현장감사에 착수해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 3월 30일 입정문을 내고 편법대출 행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대출 사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 금액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 다른 대출 같아타려고 알아보니, 대구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을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업계의 관행’이라고 설명했음을 강조하면서 장녀의 대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며 “사기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통장잔고위조를 통한 대출이 전형적인 사기대출”이라고 반박했다.

‘양문석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제가 아침뉴스를 보다 황당한 걸 봤다. 양문석이란 분 계신다. 그분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이어 “(양 후보가 대출한 자금은) 사업자금이었다.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 할 돈이다. 그게 다 걸렸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며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이분이 자기의 행동을 사기대출이라고 한 사람도 고소하겠다고 했다. 제가 분명히 말한다. 저를 먼저 고소하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분이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상의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며 “짜고 하면 죄명만 바뀐다. 짜고 하면 배임이라 죄명만 바뀔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다 사기라고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